EU, 러 원유 수입 제재 결국 좌초하나

정상회의 앞두고 제재안 논의
송유관 공급분 제외 타협안 제시
6차 제재 통째 연기 방안도 고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현지시간으로 30~3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산 원유의 단계적 금수 등이 포함된 6차 제재안을 도출하기 위해 막판 합의를 시도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AFP 통신은 29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대러 6차 제재 관련 협상에 참여한 EU 회원국 실무진들이 이날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원유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타협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유조선에 실려 해상으로 수입되는 러시아산 원유만 제재하자는 것이다.

드루즈바 송유관은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지나 폴란드,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으로, EU가 러시아에서 사들이는 원유의 3분의 1가량을 공급하는 통로다. 나머지 3분의 2는 해상으로 수입돼 왔다.

한 EU 당국자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공급되는 원유가 "당분간" 제재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타협안은 EU 순회 의장국 프랑스와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시했다.

내륙국이어서 해상을 통한 원유 수입이 불가능한 헝가리는 다른 회원국보다 2년 더 시행을 유예해 주겠다는 제안에도 러시아산 원유의 단계적 금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헝가리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는 65%에 이른다.

이달 초 EU 집행위는 향후 6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까지 석유제품까지 수입을 끊는 등 내용이 담긴 6차 제재안을 제안했지만, 헝가리가 어깃장을 놓으면서 한 달 가까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헝가리는 유예기간을 최소 4년으로 늘리는 한편 대체 공급망을 확장하고 이에 맞춰 정유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한 8억 유로(약 1조700억원) 상당의 자금을 EU가 자국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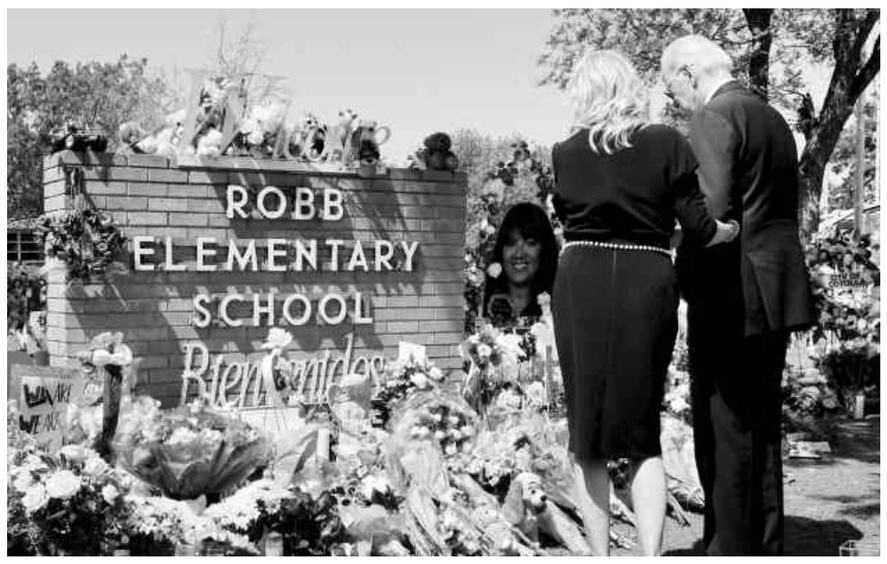
비슷한 입장인 슬로바키아와 체코는 자국에 적용되는 유예기간을 2년 반으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하지만, 드루즈바 송유관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타협안이 나오고도 EU 회원국들은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 EU 당국자는 '어렵고 복잡한 논의'를 거치고도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타협안의 내용대로라면 회원국들이 공평하게 부담을 나눠서 지지 않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결국은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머리를 맞대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EU 회원국들은 헝가리에 러시아산을 대체할 원유 공급 수단을 마련할 때까지 대러 6차 제재를 통째 연기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소도시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를 방문, 총기 난사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사에도 미국 총기규제 못하는 이유는 업체 로비·상원 필리버스터·중간선거

상원 반분한 공화당 강력 반대
보수 유권자 눈치보는 예비선거

미국에서 대규모 총기 참사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며 총기 사용에 대한 자성론이 일고 있지만, 총기 규제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 그럴까.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내 충격적인 총기 난사 참사 이후에도 의회의 총기 규제 법안 처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이 신원조회 확대와 위험인물에 대한 총기 압수 등의 규제(red flag law) 강화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핵심 법안이 통과되진 않을 것이란 깊은 냉소에 빠져있다고 더힐은 보도했다.

비관론의 중심에는 상원의 필리버스터가 있다.

상원 의사 규정상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선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은 현재 민주당(민주 성향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어 총기 규제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민주당 외에 10석의 공화당 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보수정당인 공화당 자체가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어 이는 난망하다.

상원은 지난 26일 국내 테러방지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투표를 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현재 상원에 계류된 두 건의 총기 규제 관련 법안 처리 역시 물 건너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총기 문제가 역사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간 분명한 입장차를 보여주는 이슈인데다 현재의 정치적 양극화를 감안하면 필리버스터가 무력화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총기 제조업자들의 로비도 정치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전미총기협회(NRA)를 중심으로 한 총기 제조업자들의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로비는 공화당 의원들을 쥐어 잡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의 총기 법안 통과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이러한 로비를 거론하면서 "그들의 재정적 힘이 우리 정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리처드 블루멘설 상원의원은 "총기 로비는 총기 폭력 예방에 대한 많은 반대 세력을 후원하고 있고, 일각에선 매수 얘기도 나온다"며 "이전보다는 세력이 덜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두려운 요인"이라고 말했다.

총기 참사 와중에도 지난 27일 연례행사를 개최한 NRA는 총기 소유를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등 공화당 거물들이 참석했다.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텍사스주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도 녹화 연설을 했다.

올해가 중간선거의 해라는 점도 장애물로 꼽힌다. 뉴욕주와 텍사스주의 잇따른 총기 참사 속에 그나마 총기 개혁을 검토할 수도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해서다. 공화당 예비선거가 보수적인 공화당 유권자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총기 개혁을 얘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무기 소유·휴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총기 로비단체가 총기 개혁을 반대하는 논리가 바로 이 조항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총기 규제가 수정헌법 2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사실상 없다"며 총기 규제 입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베리아 방대한 툰드라 2500년쯤 사라질 수도

獨연구팀 시뮬레이션 결과

기후변화로 시베리아의 방대한 툰드라가 2500년께는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헬름홀츠 극지해양 연구소'(AWI)에 따르면 극지환경 시스템 부문장을 맡은 울리케 헤르츠슈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각 수종의 수목한계선을 보여줄 수 있는 식생(植生) 컴퓨터 모델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과학 저널 '이라이프'(eLife)에 발표했다.

헤르츠슈 교수팀이 활용한 AWI의 식생모델 'LAVESI'는 툰드라 낙엽송의 수종별 씨앗 생산부터 씨앗 분산 전략, 발아, 생장 등에 이르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난화에 따른 수목한계선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연구팀은 이 시뮬레이션에서 수목한계선이 10년마다 30㎞ 속도로 북상해 툰드라 지역이 계속 쪼그라드는 결과를 얻었다.

전이대의 나무는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반경이 제한돼 처음에는 기후변화에 크게 뒤처지지만 나중에는 이를 따라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시베리아 툰드라는 2500년대에 현재의 6% 미만만 유지되거나 아예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온실가스 저감 조치가 최대로 이뤄져도 약 30%로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하르키우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러시아 침공 후 처음으로 수도 키이우를 떠나 북동부 전선에 있는 도시 하르키우를 방문,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WHO "원숭이두창 감지 안되고 퍼지다 증폭"

23개국서 확진 200건 넘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지 않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자가 나타난 것은 이 바이러스가 일정 기간 감지되지 않고 퍼지다 최근 증폭된 것임을 시사한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HO는 이날 성명에서 26일 기준 원숭이두창을 풍토병으로 갖고 있지 않던 23개국에서 확진 사례 257건, 의심 사례 120건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부분은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나왔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다.

WHO는 "현재까지 보고된 감염자 대부분은 이 바이러스가 자주 발견되던 지역을 여행한 적이 없으며, 1차 진료 또는 성병 검사를 통해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원숭이두창을 풍토병으로 갖고 있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막론하고 검사를 확대하고 있어 더 많은 감염자가 보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체로 증상이 경미한 원숭이두창은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만 발생하던 풍토병으로,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돼 자가 격리나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전염을 막을 수 있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무지구(상가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